

중국, 2005년 중앙1호문건에 대한 기자회견

2005년 1월 31일 중국 국무원 공보실(新聞辦)에서는 2005년도 중앙1호문건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 농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경제발전연구회 천시원(陳錫文) 부회장은 중국의 현재 농업상황, 1호문건 채택배경,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소개하고, 기자 질문에 대해 답변하였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사회자 귀위이민(郭括民)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미 정식으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농촌사업 강화와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제고 정책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언론에서도 이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천시원 부회장을 모시고 이 ‘의견’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시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화사에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농촌사업 강화와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제고 정책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의견’은 중국 농민과 농촌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2005년도 ‘중앙1호문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작년도 1호문건을 발표하였는데, 2월 8일에 공포하였고 2월 9일에 국무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국내외 언론의 ‘3농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국무원 기자실에서 매년 중앙문건을 발표 후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에 1호문건을 발표하였고, 올해에도 1호문건을 발표하였는데 2개의 1호문건은 모두 농업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으로 당과 국무원의 농업 부문에 대한 중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기가 교차되는 이 시기에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데 동시에 새로운 세기에 진입하였으며,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세기의 특징이 공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생산요소는 모두 고속으로 대규모 도시로 집중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도 세계 각국이 현대화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과정으로서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하는 과정에 중국처럼 많은 농민은 없었습니다. 이미 현대화를 실현한 국가는 공업화, 도시화를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가의 농업은 성장하였지만 어떤 국가의 농업은 오히려 약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교훈을 받아 들여, 특히 농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농민수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이것이 중국 현대화의 견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동감하였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를 한 적이 있는 당 제16차 대표자대회(전인대)를 개최한 것은 2002년 말이었습니다. 당시 장쩌민(江澤民) 총서기는 제16차 전인대의 보고에서 당 중앙위원회(중앙위)를 대표하여, 현 단계에 우리는 반드시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을 전면적으로 계획하는 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03년 초에는 중앙위 농촌업무회의를 개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중앙위 농촌업무회의의 중요한 연설에서 3농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작업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현 단계 중국의 당과 정부의 사업 중에서, 농업·농촌·농민문제가 처한 위치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2003년 당 중앙위가 발표한 당시 농촌사업 지도에 관한 문서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으며, 장기간 농업·농촌·농민에 대해 많이 지원하고, 적게 부담시키며, 자유노동(放活) 방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세 마디의 말은 신세기에 진입한 이래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 농업을 임하는 태도이며, 농업문제에 대한 일련의 정책기초를 구성하였습니다.

개괄하여 말하면, 도시와 농촌이 발전을 함께하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하며, '3농문제'를 전체 사업의 중점 위치에 놓아야 하고, 농업·농촌·농민에 대해 많이 지원하고, 적게 부담시키며, 자유노동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작년 1호문건, 올해의 1호문건은 모두 중국의 당과 정부의 기본적 구상과 정책추진의 방향을 잘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경제의 기본적인 상황과 이 문서의 내용과 중점에 관하여 기자실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재료를 배포하였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나의 견해를 언급하였는데, 여러분에게 의문점이 있다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금융통신사 기자 : 첫 번째 질문은 2005년 정부가 계획한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분야에 투입할 자금은 얼마입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이후 2년간 이와 유사한 수치를 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정부가 예상하는 2005년의 식량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2005년에도 농업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 분야의 세금을 감면합니까?

천시원 : 세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정부가 농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국가의 재정투자의 약 3분의 1가량 차지합니다.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재정은 다 경로, 다 주체의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 진행하는 투자 중에 농업이 점유한 비중은 결코 적지 않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700억 위안 이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05년의 식량생산의 예상목표에 대해서입니다만, 작년에 전인대에서 대표들이 통과한 정부업무보고 중에 2004년의 식량 총 생산량이 9,100억 근(500g)에 달할 것을 희망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지도성 목표일뿐입니다. 연간 시행상황으로부터 보면 초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구체적인 목표도 전인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전체 시장수요의 상황으로부터 보면, 정부의 요구는 계속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소 초과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농민에 대해 세금감면 문제로서 작년의 기초위에 올해에는 세금감면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면할지는 전인대에서 재정정보를 심의할 때 정식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CCTV 기자 : 농촌에서 ‘이중 노동’을 취소한 후 한편으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동시에 원래 빈약한 농촌기초시설 건설의 투입이 명확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인터뷰 중에서 작년 남방의 가뭄은 물자원의 부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물 관리 부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수리공정의 노화현상이 나타나 매우 중요한 시기에 물 공급이 부족하였고, 또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것입니다. 금년 1호문건 중 기초시설 건설분야에서 이에 대해 무슨 구체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천시원 : 지금 제기한 문제는 확실히 2~3년 이래 농촌 각지에서 관심을 모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수리만을 논해도 중국에는 관개시설의 경지면적이 8.3억 무를 초과하기에 수리는 중국 농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듯 대규모의 수리건설은 주로 정부의 투자 건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농촌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노동축적의 형식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세계개혁의 과정에서 ‘이중 노동’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주로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일부 대형 기초시설의 건설은 원래 정부에서 투자해야 하는데 몇몇 지방에서 정책을 어기

고 농민들의 노동을 강요하여 농민의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는, 어떤 지방에서는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시기가 농민의 농작업과 중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집에서 상업적 활동을 해야 하거나 노동력이 외지로 일하러 가서 집에 없으면 농민이 원하면 노동하지 않고 일정한 돈으로 임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일부 지방에서 자원적인 노동을 취소하고 농민을 압박하여 돈을 내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동’을 취소하는 것은 주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은 예로부터 농민의 노동력 투입을 격려하였으며, 자신의 생산과 생활에 직접 이익을 얻는 작업을 자기 노동으로 건설할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문서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하는데, 첫째 농민이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소형 사업이고, 둘째 엄격한 민주토론의 정책결정 절차를 통과하여야 하고, 셋째 농민이 이런 사업의 비용지출을 감독하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농민이 소형 농지수리시설 건설에 계속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부문의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세계개혁 전에 중국 농촌 전체는 수리시설의 회복과 새로운 수리시설의 건설에 적어도 100억 노동일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런 노동력을 구입한다면 1,000억 위안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많은 지역의 수리공사 건설을 완전히 정부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에서는 농민들이 자신의 생산,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원만한 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자력갱생하고 노동력을 투입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건을 보았다면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문건은 정부부문에서 반드시 엄격하고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정할 것을 강조하고, 어떤 공정은 농민들이 노동력을 투입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안 되는 지를 구분하고, 또한 농민의 민주적 토론 절차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건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농민이 노동력을 투입한 소형 수리사업에 대해 재료를 구입할 경비보조를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후자는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財經日報 기자 : 일부 경제학자, 많은 관원들은 모두 현재 중국은 이원화 구조의 사회로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득격차가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위에서 당 간부학교에 이르기까지 중국경제정세보고회를 가졌는데 당시 농업부 정책과에서 2004년의 중국 농민소득이 비록 큰 향상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지금의 발전 속도를 따른다면 2020년에 이르러 중국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는 7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올해 1호문건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올해 1호문건의 제7조는 농촌투자금융제도 개혁을 완비하고 농민의 투자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촌에는 보편적으로 농민간의 민간대부금이 존재하는데 당신은 이런 민간금융을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천시원 : 첫 번째 문제는 한 때 매우 관심을 모은 문제로서 중국의 도시와 농촌주민의 소득격차에 관한 문제인데, 2003년 통계국의 데이터에 근거하면 도시와 농촌주민사이의 소득차이는 대략 3.23배인바 3.23명 농민의 소득이 한명의 도시주민의 소득에 해당한다. 작년의 1호문건 중 중앙위에서는 일련의 농민소득의 증진을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게다가 작년에 날씨 덕분에 수확이 좋았으며 식량가격도 회복을 가져왔기에 농민소득의 증가가 비교적 큰 한해였습니다. 현재 각 분야에서 수집한 상황으로부터 보면, 2004년 도시와 농촌주민사이의 소득차이는 더욱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호문건에 대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모두 9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1부분은 직접 중앙에서 각종 정책을 채택하여 농민을 도와 수입을 증가하며 계속적으로 농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한다고 하였습니다. 농민의 수입증가문제에 있어서 중국에는 근 8억의 농민이 있기에 신속하게 그들의 소득수준을 도시주민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가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민소득을 늘린다.

(2) 농산물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조절통제를 진행하여, 수급 전체의 균형, 가격 안정을 보증한다.

(3) 농민 수를 계속 줄이고, 반면에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 규모를 점차 확대시킨다.

(4) 재정분야에서 농업·농촌에 더욱 많이 기울어 농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조치를 통해 농민의 소득은 점차 증가될 것이나 이는 하나의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나는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농민소득과 도시주민소득의 차이가 7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금융 문제로서 이미 매우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의를 모으고 있고, 사실상 정부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농촌에서 민간용자의 활약은 실제로 정규적인 금융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 1호문건에서는 금융부문의 개혁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금융적 지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민간금융이 완전하게 제거되지는 못하겠지만 도시에서도 비슷한바 정규적인 금융이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지를 크게 늘린다면 민간 금융시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금융부문에서 이런 민간금융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을 통제하여 그것

이 농민의 고리대금으로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은 차용과 대출상황을 감독하여 금융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트남 VNA 기자 : 중국에는 7억이 넘는 농민이 있는데 그 중 생활이 빈곤한 농민의 비율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2005년 중국 정부는 빈곤 농민의 비율을 축소하고,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천시원 : 내가 이해하기로는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농촌에서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인구의 감소에 관한 문제인 듯한데,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2003년말 이런 빈곤인구가 중국에서 2,900만 명이었는데 작년 한해의 노력을 통해 대략 300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중앙 1호문건에서 이미 일련의 정책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4가지 조치입니다: 즉,

(1) 문건에서는 중앙재정에서 빈곤감소자금에 대한 투입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2) 각 분야에서 빈곤지역에 투입하는 개발성 자금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한다는 의견을 제시되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농산물가공과 판매의 대표기업이 빈곤한 농민의 취업을 알선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정부에서는 재정투입을 증가시켜 빈곤지역, 특히 아직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인구들에 대해 전문적인 직업기능훈련을 진행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도 이주하여 취업하도록 하고, 따라서 그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빈곤인구의 수는 300만 명 줄었는데, 이는 21세기 이래 4년간 감소가 가장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줄일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2,600만 명 수준에서 더욱 낮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南華早報 기자 : 방금 농민수를 줄어야 하고, 호당 생산규모는 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 농민의 감소는 그들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토지를 잃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농민 수량을 감소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산규모는 확대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농사짓지 않는 농민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그들의 사회보장과 취업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리고, 작년 식량생산의 부족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올해 목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천시원 :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거시조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토지전용 규제에 강화하였습니다. 작년에 이미 정책을 채택하였었는데, 우선 반년동안 농지를 비농업용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동결하여 심사허가하지 않고 엄격하게 통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10월말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28호 문건에 관한 것인데, 이 문건은 어떤 상황에서 땅을 점유할 수 있고, 땅을 점유한 후에 어떻게 농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하고, 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농민 수를 줄여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경영규모를 확대한다고 한 것은 그들과 도시화·공업화로 인해 농지를 전용하는 농민과는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업화·도시화는 당연히 일부 토지를 전용하게 되는데 이런 땅을 잃은 농민들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이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중국은 가장 엄격한 농지보전제도를 시행한다.

둘째, 공업화·도시화로 인해 전용된 농민의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농민들이 공업화·도시화의 성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더욱 빈곤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의 경영규모를 확대함에 있어서 중국이 시행하는 것은 토지를 임차한 농민이 임차기간(법률규정상 30년) 내에 농민이 이농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의 땅은 다른 사람이 경작하도록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영규

모를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량부족 문제로서 국내 식량생산량과 총수요량의 불균형을 말하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런 공급부족이 존재하였습니다.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예상한 식량 생산목표가 9,100억 근(500g)인데 작년 국내의 총수요가 대략 9,800억 근으로 예상에 비해 700억 근의 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간 기후가 비교적 좋고 곡물가격이 비교적 높았으며, 농민들도 양식생산의 적극성이 있었기에 실제 부족은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이 숫자는 2월말에 전인대가 열리기 전에 국가통계국에서 작년 식량의 구체적인 생산량을 발표할 것입니다. 올해 1호문건의 주제가 토지의 생산능력 향상을 강조한 것은 토지 생산성을 높인 후 점차 지금의 식량생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데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식량재고도 상당히 넉넉하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합니다. 2004년부터 식량 수입이 증가하였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은 식량 수출국이었으나 작년에 이미 수입국으로 바뀌었으며 대략 8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였습니다. 식량 생산과 그 해의 수요에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시장에서는 결코 수급이 긴장한 국면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하이해방일보 북경주재 기자 : 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중앙 1호문건의 주제는 농민 소득을 늘이는 것이고, 올해 1호문건의 주제는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는 농민의 수입증가 문제를 종합생산능력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천시원 : 이 문제는 사실 방금 ‘재경일보’ 기자의 물음에 대답할 때 언급했었는데, 중국 농민의 소득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렵고 고달픈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 작년에 농민수입이 증가하였다고 농민 소득문제가 바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중국 농업에는 분명히 하나의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는 농민의 소득 증가폭은 비교적 큰 것으로 이미 이

해한 상황에 근거한다면, 전국 농민 1인당 평균 300위안 이상의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민 자신들도 식량증산이 비교적 많았고, 소득이 늘어난 데 대하여 2004년 1호문건 중 농민을 지원하던 정책이 변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작년 8월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쓰촨(四川) 농촌방문 때 당시 농민들에게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정책이 변할까 걱정하는 농민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책은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을 증가하여 한층 안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작년에 농민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방금 말한바와 같이 기후조건, 각종 농산물 증산, 가격 상승 등으로 농민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여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외도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수입을 증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작년에 농민의 환영을 받은 정책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 감면, 3 보조’라고 하는데, 즉 농업 특산물세를 면제하고, 농업세를 경감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직접적 보조를 주고, 또 농민들의 우량종 재배 및 농기구를 구입하데 일정한 보조를 하여 농민들에게 451억 위안의 실제 이익을 주었습니다. 올해 중앙문건 제1부분을 본다면 작년에 농민에게 준 451억 위안의 보조는 모두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는 새로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건은 후진타오 총서기가 강조한 “좋은 정책은 변하지 말아야 하고 농민에게 주는 실제 이익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문건이 강조한 주제는 비록 농업 종합생산능력 건설

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농민의 수입증가 문제를 추호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중국 농촌에는 방대한 농민들이 존재하기에 모든 것을 정부에서 보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유해지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농민에 대해 수입을 증가시키고 부담을 감소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농민들이 치부를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제고하여야만 농업소득이 진정 향상될 수 있으며 농민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일보 기자 : 중국의 농업·농민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에 대해서는 1호문건 중에서도 WTO 규정에 부합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국 농업이 WTO의 감축대상정책(amber box)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 규정상에서 어떠한 수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관련 통계가 제시하는 것입니다만 중국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2004년 55억 달러에 달하였고, 그 중 중국이 비교적 우세를 차지하였던 축산품도 수지 적자가 약 10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천 부회장은 이런 적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농산물 무역은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까?

천시원 : 첫 번째 문제를 놓고 볼 때, WTO 규정에 근거하면 허용대상정책은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선진국의 보조는 농민 생산액의 5%이고, 개도국은 10% 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액의 8.5%에 상응한 금액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비록 농민들에게 일부 보조를 주었지만 우리가 WTO에 합의한 생산액의 8.5%와 비교할 때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에 비교적 큰 적자가 나타난 데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작년에 농산물의 수출입 구조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로는 2003년에 우리는 2,000만 톤을 초과하는 식량을 수출하였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8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한 것입니다. 때문에 적자가 대폭 발생한 것입니다. 식량 수출입분야에 존재하는 적자에 관해서는 방금 ‘南華早報’ 기자의 질문에 말한 바와 같이, 개인 의견으로는 국내 식량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은 앞으로 계속 존재하며, 식량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현상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분야들을 말하자면 신선 농산물, 채소, 과일, 가축 제품 등은 다년간 수출금액이 증가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축산품이 작년 11개월간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데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주로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국내의 시장소비수준이 끊임없이 향상하여 일부분의 고급 혹은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의 수입이 확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작년 축산품 수출은 솔직하게 말하면 몇몇 지역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난데 있는데, 바로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의 수입품질표준을 대폭적으로 제고한 것이 원인입니다.

농산물의 품질표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강을 제고하는데 완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기준은 과학적인 근거에 있어야 하며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WTO 틀 안에서 농산물의 수출입 품질표준문제 및 일부 국가에서 자국 농산물의 수출보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농산물의 수출에서 부딪친 불공평한 대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中華工商時報 기자 : 얼마 전 저는 천 부회장의 보고에서 2005년 농민의 수입증가 공간이 아주 작고 작년에 수입증가의 원인은 정책과 가격의 문제였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은 방금 전에도 가격과 기후는 어느 때나 유리한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전문가의

각도에서 농민들의 올해 수입증가에 있어서의 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주십시오.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통계국에서 작년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나고, 쌀 생산량은 부족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농민 중에서도 “내년에 도대체 무엇을 재배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십시오”라는 말이 자주 오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야 자기가 심는 작물과 시장의 수요가 일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문제는 원(溫家寶) 총리가 말하기를 5년간의 시간으로 농업세를 전면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작년의 집행상황에 근거하여 2년 앞당겨 완성할 수 있는가?

천시원 : 첫 번째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줄곧 기회와 장소만 있으면 내가 늘 강조하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농민수입의 증가 폭이 비교적 크다고 하여 농민소득 문제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바, 올해 기후와 가격은 매우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이 두개 요인을 고려하면 올해 농민소득을 제고시키는 난이도는 작년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 1호문건은 농민의 수입증가를 지지하는 좋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각급 정부와 각급 간부가 이런 정책을 농촌기층에 잘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차 5개년 계획의 규정에 근거하면, 계획 기간 중 농민 1인당 GNP 증가율 5% 달성에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또한 올해 우리 농민들의 수입증가 목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선진국이나 개도국 농민을 막론하고 전세계의 농민들 모두가 내년에 무엇을 재배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정확하게 농민에게 알려주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에서도 일부 조절통제 수단과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품들이 남아돌고 있다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비축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취

하는 것입니다. 농민 자신도 시장가격의 변화부터 이 제품은 시장에서 남아돌거나 부족한 정도를 예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1호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에서 채택한 정책과 조치 이외 특히 강조하는 것은 농산물시장의 건설, 특히 농산물시장정보체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작년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10기 전인대 2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는데 5년간에 농업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은 그 회의에서 박수시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강렬했던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감소시킨 후 감면하는 세금액은 중앙정부에서 지불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기초 지자체, 농촌의 교육위생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증할 수 있기에 5년 내에 감면하는 결정은 국가재정의 감당능력 및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을 고려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농민의 농업세를 완전히 면제하였는데 중앙정부는 2004년에 지린성(吉林)과 헤이룽장성(黑龍江)에서 농업세를 완전히 면제하도록 하였고, 농민들로부터 줄어드는 세금부담은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1호문건에는 만약 지방정부가 원한다면 성시의 1급 정부에서도 지불을 증가하여 그들의 농업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31개 성·시·자치구의 8개 성시 자치구에서 농업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올해 1호문건 중에도 세금 감면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중앙에서 조건이 있고 능력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로 세금면제를 해결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올해에는 현재까지 대략 16개성에서 추가로 농업세를 감면할 것을 제안하여, 아마 25개의 성시자치구에서 전부 농업세를 면제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각지의 실제상황으로부터 보면 방금 말한바와 같이 작년에는 5년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5년이 아니라 더욱 짧은 시간 내에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지방정부가 이렇

듯 적극성이 높아 주동적으로 농업세를 철폐한다는 것은 적어도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각급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같이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해결에 고도로 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지의 경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져 성시급의 정부에서도 자체 재력으로 기초자치체의 농업세를 면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중앙재정에서 지방의 농업세를 줄이기 위하여 지불한 보조금이 524억 위안에 달합니다. 올해 또한 지원이 증가할 것이지만, 농업세 감면이 얼마일지는 전인대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곽위민 : 오늘 기자회견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